

혁신도시 기능별 통폐합 '파문'

농업·정보문화 공공기관 나주 이전 무산 위기

정종환 국토장관 "6월까지 수정계획 내겠다"

혁신도시 조성의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가 현재 10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기능별 통폐합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묶이면서 한국농촌공사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문화 관련 기관의 이전이 무산돼 반쪽으로 전락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사실상해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영광·장성·함평)이 입수한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주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자료에서 토지공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한 사업추진 방향 ▲지자체의 의지 미흡 ▲토지 공급 시기 지연에 따른 자금 수급 차질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관별 협조 한계 ▲

행정구역 조정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재검토를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이와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전 등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광주 LED·첨단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호남광역경제권과의 기능 연계 및 역할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기능별로 통폐합되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력산업군만 남게 돼 입주 대상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업관련 기관 4곳(농촌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전자연구소, 한국전파진흥원 등 4곳의 정보통신 기관도 다른 혁신도시로 옮겨 갈 수 있어 지자체와 지역민

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하면 규모가 축소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토지공사의 자료는 실무자들의 의견 개진 차원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6월 이전에 수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혁신도시 문제는 다음달 2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간의 첫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전한 전남 축산물 먹읍시다"



28일 광주시 동구 구 전남도청 앞 민주소공원에서 농협관계자·공무원 등 500여명이 전남 축산물 소비확대를 기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전남도,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녹색의 땅, 안전축산물 소비확대 디딤대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10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전남 등 골프장 그린피 인하

경제활성화 회의

오는 2012년까지 남해안에 섬·크루즈 등 5개 테마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남 등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이용가격)가 3~4만원 내리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또 서비스 수출에 2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늘리는 한편 의료기관의 합병·구조 조정을 유도해 해외 환자 유치로 돕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방안과 30대 그룹 투자·고용 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6% 성장 달성이 매우 어렵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당분간 20만 명 내외로 지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 적자도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30대 그룹은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26.6%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 규모도 18.3%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액은 95조6천억원, 채용 규모는 7만7천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확정·발표하고 관광·의료관광·유학연수·지식기반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여수 세계박람회와 앞서 2011년까지 여수항 내 크루즈 여객터미널을 완공하고 남해안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의 개발·이용을 지원하는 가치 '마리나법'도 올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섬(200여개)·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 등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

안의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종합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 합동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등(2만1천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천원)을 전면 감면하고 재산세(원형 보전지)도 낮춰 그린피를 3~4만원 내릴 수 있도록 해 해외 관광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릴 방침이다. /김주정·박지경 기자 jjnews@



'우주인' 이소연씨 귀국

귀환 충격 당분간 휴식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 박사가 28일 오전 9시1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박사는 지난 8일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나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0일간 머물며 18가지 과학실험과 각종 우주 퍼포먼스 등 우주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이 박사는 국내에서의 외부 일정을 당분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8일 "지구 귀환시 받은 충격 등으로 이소연씨의 몸 상태(칸디션)가 좋지 않아 당분간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총복 침주에 있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휴식 및 의학검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씨는 29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방문해 김도연 장관에게 임무 완



이소연씨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어머니 정금순씨와 만나 귀환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수를 보고한 뒤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었으며, 다음달 3일 광주를 방문해 김도연 장관에게 임무 완

"지자체 현안 해결하는 감사를"

정부합동감사반·광주시민감사관 간담회

"지자체의 현안과 애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시민감사관)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종 문제점을 정부 부처에 건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합동감사반장)

28일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합동감사반(반장 김경희)과 광주시 시민 감사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문제를 제언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이 새 정부들이 광주시에 대한 첫 감사를 하면서 지역 현안을 시민·지자체와 함께 고민하는 '카운슬링' 감사를 표방한 데 따른 새로운 모습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시민 감사관 김유지씨는 "광주시내에 지하 공동구 시설 많지 않기 때문에 전봇대들이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정부에 전달해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 감사관들은 또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지자체의 현안 등 문제점을 중앙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줬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경희 감사반장은 "시민 감사관들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